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용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7
----------	------

발의연월일 : 2020. 9. 25.

발 의 자 : 조용천 · 박상혁 · 최인호
홍정민 · 박성준 · 이탄희
주철현 · 오영환 · 정춘숙
이성만 · 용혜인 · 강민정
양정숙 · 양경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마927).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언제든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기 위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해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시행됐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과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불충분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③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에게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에게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u>
<u>③ ~ ⑤</u> (생 략)	<u>④ ~ 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u>⑥</u> 제1항부터 <u>제5항까지</u> 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u>⑦</u> ----- <u>제6항까지</u> ----- ----- -----.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